

## 미·중 전략경쟁 시대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신종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미중관계는 이미 글로벌·지역적·쌍무적 차원에서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일상화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진입했으나, 상호 ‘전략적 불신’이 여전히 있다는 점에서 양국관계의 진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미중관계는 중국이 제안한 ‘신형 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에 대한 미국의 호응 여부에 영향을 받겠지만, 지역별·사안별로 전략적 협력과 갈등, 그리고 ‘규범(norm) 경쟁’이 반복될 것이다. 양국의 경쟁과 갈등이 반복 지속될 경우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강대국정치가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국가이익 우선의 원칙있는 외교, 한·미·일 전략 소통,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전략비전을 주변국에 선제적으로 제시, 한·미·중 정책 공조 협의 채널 가동 등이 요구된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6.1.29) 발표자료

## 목 차

1. 미·중 전략적 협력과 경쟁의 일상화
2. 미·중 양강(G2)체제 도래의 함의
3. 미중관계의 새로운 틀: 신형대국관계
4. 향후 미중관계 전망
5. 한국의 전략적 선택

## 1. 미·중 전략적 협력과 경쟁의 일상화

- 최근 국제정치의 핵심 키워드는 기존 패권국 미국의 글로벌·지역적 영향력에 대한 신흥강대국 중국의 도전임
  -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에 따라 새로운 ‘미중 양강(G2)체제가 도래
  - 미드(Walter R. Mead)의 ‘지정학의 부활(The Return of Geopolitics)’ 주장 역시 새로운 G2체제의 중요한 변화를 반영
- 물론 중국의 부상이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를 촉진하면서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쟁점
  - 찬성론자들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대외정책 역시 공세적(assertive)이고 민족주의적 성향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
  - 회의론자들은 미국의 군사력이 여전히 중국을 압도하고 있고, 미국의 힘(power)과 사명감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강조
  - 실제로 미국의 국방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의 5배 이상이며, 미 국방부는 군사혁신과 함께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공해전(ASB)’ 전략을 운용하기 시작
  - 중국의 대표적 현실주의 학자인 옌쉐퉁(閻學通) 역시 2023년경 미·중 양강(兩極)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을 주장하면서도 경제력이 아닌 군사력·문화력 측면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격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전략경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은 명확해 보이고, 국제사회의 관심은 양국 간 ‘세력전이’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두 강대국은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을 피할 수 있는지 등에 집중
  - 즉,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의 재편을 시도할 것인지, 또는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점차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기존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아태지역에서 존재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두 강대국(G2)이 충돌할 것인지 등이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
  - 2015년 9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미국 방문 시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미·중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남중국해 문제와 사이버안보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 혹은 경쟁은 오히려 심화되는 추세
- 이처럼 미중관계는 이미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일상화되는 ‘뉴노멀

(new normal) 시대에 진입했으나, 상호 ‘전략적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양국관계의 진전은 쉽지 않은 상황

- 그동안 미·중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협력 속 경쟁”을, 지역적·쌍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경쟁 속 사안별 협력”을 추구하는 복합적 관계를 유지
  - 두 강대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협력’ 분야는 늘리고 ‘경쟁’ 요소는 줄여가야 하는데, 문제는 바로 미·중 간 국력 차이가 갈수록 좁혀짐에 따라 상호 전략적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
  - 중국이 제안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구축에 대해 미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 역시 상호 전략적 신뢰 부족에 기인
  - 최근 미중관계는 기존의 이익경쟁과 함께 국제 ‘규범(norm)’과 제도를 둘러싼 경쟁을 병행하는 새로운 추세도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미중관계의 뉴노멀 시대의 도래는 한국 외교에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기하는 매우 중요한 변화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 필요
- 즉, 그동안 우리의 대외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 모색 필요
- 이 글은 미·중 양강(G2)체제 도래의 의미를 파악하고, 중국이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제안한 배경과 의도 및 미국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미중관계의 발전 방향을 전망하고 한국의 전략적 선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 미·중 양강(G2)체제 도래의 함의

- 냉전시기의 미·소 양극체제와 비교할 때, 새로운 미·중 양강(G2)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다극화, 다원화된 상호의존적 체제라는 것임
  - 냉전시기의 미·소 양극체제는 상대방에 전면적인 대립을 추구하는 제로섬(zero-sum)적인 특징이 존재
  - 반면 새로운 G2체제는 기존 패권국 미국이 주도하던 힘(power)의 배분이 중국으로 대표되는 신흥대국으로 분산되는 다극화가 진행
  - 강대국관계도 역시 기존의 이념·안보·군사력 경쟁을 넘어서 글로벌 이슈(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물 등)는 물론 규범·제도 경쟁 등으로 다원화
- 새로운 G2체제는 미·중의 상호의존성과 취약성이 심화되어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이고 독점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협력이  
일상화되는  
‘뉴노멀’ 시대의  
도래는 한국의  
대외전략에 기회와  
도전을 제공*

**다극화·다원화된****상호의존적인****G2체제에서 미·중은****글로벌·지역적·****쌍무적 현안을 둘러싼****힘 겨루기를 진행하고****있고, 중국의****‘핵심이익’ 강조와****영향력 확대에 대한****미국의 아태전략****조정 및 중국 견제****등으로 표출**

- 따라서 미·중은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현실적·구조적 제약성을 인정하고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기조로 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양국은 ‘미중 전략·경제 대화’를 쌍무 현안뿐만 아니라 글로벌·지역적 이슈를 공동 논의하는 기제로 활용하고 있고, 2010년 이후 중단되었던 군사협력을 2011년부터 재개

- G2체제의 도래는 미·중의 상호인식에도 새로운 변화를 초래했고, 양국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역시 좀 더 다양화·다원화
  - 미국은 중국의 글로벌·지역적 영향력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중국은 미국과 국력격차가 많이 축소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대미정책을 추진
  - 기존의 미중관계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 중국이 대응하는 형태로 전개되었고, 체제, 가치관, 이념 등 구조적 요인과 양국의 국내정치적 요인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음
  -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외·대미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및 ‘핵심이익(core interest)’을 둘러싼 경쟁 등으로 다양화·다원화

- 이를 반영하여, G2체제 형성 초기 글로벌·지역적·쌍무적 현안을 둘러싸고 미·중 간 힘 겨루기가 전개되었고, 중국의 대미정책도 좀 더 적극적·공세적으로 변화

- 2010년 미·중 간 글로벌 차원의 비전통안보 협력은 확대되었으나, 이란 핵문제, 남중국해 문제, 천안함 사건 등 지역 이슈와 무역마찰, 위안화 절상, 달라이라마, 대(對)대만 무기수출 문제 등 쌍무현안을 둘러싼 견해 차이와 상호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됨

- 중국은 미국에게 서로의 ‘핵심이익’과 관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기 시작

-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이었던 다이빙궈(戴秉國)가 언급한 중국의 핵심이익은 ① 중국공산당 영도와 사회주의제도 및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 ② 중국의 주권안보와 영토보존 및 국가통일, ③ 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적 발전 등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것임

- 그러나 중국의 ‘핵심이익’ 강조와 역내 영향력 확대 노력은 주변국의 우려를 촉발했고, 미국은 아태지역 전략 변화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의도 표출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3년 동안 중국이 보여준 적극적인 대외정책은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일본 및 주변국의 우려를 촉발시키면서

‘기존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국가’ 이미지를 형성

- 미국은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선언 및 2012년 ‘신(新)국방전략지침(Defense Strategic Guidance)’ 발표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재균형(Rebalancing toward the Asia-Pacific)’ 전략을 제시
-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는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직접적인 대미 공세는 자제함으로써 미국과의 협력 관계 유지를 희망
- 결국 2012년 말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미국을 겨냥한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주장함으로써 미국과의 국력 차이를 인정하고 국제질서에 도전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부상’은 인정받으려는 의도를 표출

### 3. 미중관계의 새로운 틀: 신형대국관계

- 중국은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후반기부터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주장했고, 2013년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
  - 후진타오 시기 중국은 ‘발전도상국’이라는 정체성에 기반하여 패권국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은 회피하는 대신 다자주의나 국제기구를 통한 국가이익 확보를 선호
  -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은 ‘강대국’ 정체성에 기반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구축 노력을 본격화함
  - 신형대국관계의 핵심 내용은 “不충돌과 대대항, 상호존중, 협력과 공영(win-win)”으로, 주권과 영토 등 핵심이익(core interests) 수호를 전제로 하여 체제와 발전방식에 대한 상호존중을 강조
- 중국이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제안한 것은 시진핑 시기 중국의 외교전략 변화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전략에 대한 대응이 목적
  - 시진핑 지도부는 기존의 평화적 발전(和平發展) 노선은 유지하되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외교정책 추진 및 ‘핵심이익’ 수호를 동시에 강조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자국 견제로 인식한 중국은 국내외 현안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패권경쟁은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핵심이익 수호를 전제로 한 신형대국관계를 제안
  - 즉, 중국은 자국 역량의 한계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글로벌·지역적 현안에 대한 전략적 양보를 얻어내기 힘든 상황에서, 패권국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은 피하면서도, ‘중국의 부상’은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
- 미국은 중국의 제안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신중한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은 “不충돌과 대대항, 상호존중, 협력과 공영(win-win)”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제안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는 인정하되 ‘중국의 부상’은 존중받으려는 의도를 표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불신으로 인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오히려 중국의 국제무대에서의 책임성과 규범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 구축 가능성은 높지 않음**

-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불신에서 기인
- 미국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환영하는 형태로 화답하고 있으며, 중국에게 국제무대에서의 책임성과 규범(norm)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두드러짐
- 2014년 5월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에서 시진핑이 “아시아의 안보는 결국 아시아 인민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는 ‘아시아 신안보관’을 언급한 이후, 미국은 이를 강력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호주와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등 중국의 패권 확장을 견제하는 데 주력
-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수립 제안을 1930년대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주장한 ‘먼로독트린’과 유사한 중국판 ‘먼로주의’로 인식하는 그룹이 다수 존재
- 신형대국관계는 중국이 미국에 제안한 최초의 양자관계 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구조적 변화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음
  -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인정하고 도전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여기에는 상호 핵심이익을 존중한다는 조건이 전제됨
  -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국정책은 ‘억제’보다는 국제질서에 중국을 끌어 들여 책임을 강조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중국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
  - 또한 미국은 군사력 등 종합국력에서 여전히 중국을 압도하고 있고 자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중국의 제안은 수용되기 어려움
  - 다만, 미·중 양국이 서로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통 인식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미·중 간 상호이해 증대와 전략적 양보가 이루어진다면 신형대국관계 수립 가능성은 증대

#### 4. 향후 미중관계 전망

- 향후 미중관계는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미국의 호응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겠지만, 지역별·사안별로 전략적 협력과 경쟁 혹은 갈등 반복 전망
  - 글로벌 차원: 세계경제의 역동성 증대 및 양국 경제의존도 심화 등에 따라 테러, 환경, 글로벌 경제회복, 우주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협력 기조 우세
  - 지역적 차원: 미·중 양국이 갖고 있는 자국의 군사적·경제적 자신감 및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불신 등으로 인해 지역적 차원에서 미·중의 영향력 확대 경쟁은 불가피. 다만, 민감한 지역적 이슈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현상 유지 가능성 불배제

- 쌍무적 차원의 전략적 갈등: 사이버안보(해킹), 중국이 제안한 신형대국관계 수용 여부, 대만 민진당 차이잉원 정권 출범 이후 미국의 무기판매 문제 등
- 미중관계는 단기적으로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인정하면서 협력 기조를 유지(#1), 중기적으로는 중국이 주도권을 확대하여 좀 더 공세적인 대미정책을 추진(#2), 장기적으로 중국이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에 노력할 것으로 전망(#3)
  - 단기 전망(#1): 현재 미국은 중국과 갈등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고, 중국 역시 이와 같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융화되면서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 증대, 상호 유학생 증가, 정보기술(IT) 분야 협력 등 협력 강화 요인이 여전하고, 미국은 자국 채권의 최대 보유국이자 경제 강대국으로 급성장한 중국의 존재를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
  - 중기 전망(#2):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융화되면서 점차적으로 주도권을 확대. 중국은 미국의 국력이 점차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그동안 대미외교의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강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목소리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가능성 증대
  - 장기 전망(#3): 미·중 간 정치체제와 가치관 등 다른 점이 많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융화되기보다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 이는 곧 중국이 지금까지는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규칙을 따라가며 배우는 ‘학습자’ 위치였으나, 향후 ‘규칙·규범 제정자’로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고, 결국 미중관계는 기존의 ‘이익경쟁’에서 ‘규범경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증대
- 결국 향후 미중관계는 국제질서에 대한 ‘규범(Norm) 경쟁’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그 징후는 상당 수준으로 표출
  - 미국은 그동안 국제정치경제의 주요 행위자로서 국제규범과 규칙 및 제도 등을 주도적으로 형성. 하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 패권의 ‘상대적 하락’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기존의 규범과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조
  - 중국은 규범과 제도를 통해 ‘평화적 발전’이라는 대외정책 목표를 실현할 것을 강조. 특히 중국에서 개최되는 CICA와 같은 다자외교 무대에서는 미국 주도의 아태지역 국제질서와 대비되는 새로운 안보규범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적 어젠다를 주도하려는 의도를 표출
  - 다만, 중국지도부가 제시하고 있는 외교적 수사(修辭)가 모호하고, 중국적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인류

**향후 미중관계는 신형대국관계 구축 여부에 영향을 받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인정하며 협력기조를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주도권을 확대하여 공세적인 대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에 노력할 것으로 전망**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갈등은 동아시아는 물론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동맹국 미국과 신흥강대국 중국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 증대**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도 존재

## 5. 한국의 전략적 선택

-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및 규범경쟁은 역내 국가 간 전략·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와 한반도 문제 등에도 영향
  -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됨으로써,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와의 관계 설정 중요
  -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책임공방 표출. 즉, 미국은 대북압박을 위한 중국역할론을 강조했고, 중국은 북한 도발 원인이 일차적으로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있음을 주장
  -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역시 양국 간 현안으로 대두.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및 한미동맹관계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고려, 중국은 한·미의 사드 배치가 자국의 전략 역제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인식하여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
  - 미중관계의 악화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남북관계와 한중관계 및 중일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미·중 갈등은 특히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도발 지속이라는 전략적 오판으로 이어질 가능성 증대
- 미·중 갈등관계가 지속될 경우 정치·군사는 미국, 경제·통상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이 큼
  - 그동안 미중관계가 협력적일 때 한미동맹과 한중관계가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은 역내 갈등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 동아시아에서 미·일과 중국 간의 갈등이 첨예할수록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변할 것이고, 북중관계와 북일관계 및 중일관계의 변화 추세에 따라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북핵 문제 해결도 갈수록 요원해질 수 있기 때문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및 통일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내 강대국 간 갈등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 확보가 시급
  - 첫째, 미·중 규범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이익 및 외교원칙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즉, 국가이익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교원칙과 방향을 정립하여 대외관계에 일관되게 적용 필요가 있음

- 둘째,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한·미·일 전략적 소통을 중시하되,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의 적으로 돌리지 않는 대외정책 역시 동시에 고려 필요
- 셋째,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추진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전략비전을 마련하여 주변국에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문제 및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
- 넷째, 북핵 문제는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중국과 한·미의 입장 조율을 한국이 주도하여 북한의 변화 유도 필요. 이러한 의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에서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혼란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대북제재는 전면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했다는 점은 한·미·중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 및 대북제재 국면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결국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전략 구도는 많은 변화를 겪겠지만, 한·미·중 정책 공조는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 공조의 대상과 방법 및 목표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협의 채널 가동 필요

**강대국관계가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이익에 기반한  
원칙있는 외교정책,  
한·미·일 전략적  
소통과 한·미·중  
정책 공조, 한중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 등이 필요**

#### 참고문헌

- 김재철. 2010. “세계금융위기와 중국의 대미정책.” 『中蘇研究』 제34권 제2호.
- \_\_\_\_\_. 2015. 『중국,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신흥 강대국의 부상과 지역질서』. 파주: 한울아카데미.
- 김홍규·신종호. 2013. “대중국 외교.” 윤영관 편저. 『한국외교 2020: 어디로 가야 하나?』. 서울: 늘봄 플러스, pp.169-232.
- 신종호. 2012. “중국공산당 제18차 당 대회와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 『국제문제연구』 제12권 4호.
- \_\_\_\_\_. 2015. “중국의 공공외교 전략.” 김홍규 엮음.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안보: 그 패러다임의 변화』. 서울: 동아시아재단, pp.159-189.
- 엔쉐통 지음. 2014. 『2030 세계사 불변의 법칙』. 서울: 글 향아리.
- 전재성·주재우. 2012.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미래 외교 과제.” 『EAI 국가안보패널 연구보고서』.

정재호. “미-중관계의 진화(進化): ‘전략적 경쟁’ 단계로의 진입?” 『중소연구』 제37권 제4호(2013/2014 겨울).

金燦榮·趙遠良. “噢巴馬連任後對外政策及中美關係前瞻.” 『現代國際關係』 2012年 12期.

戴秉國. “堅持走和平發展道路”(http://www.fmprc.gov.cn/chn/gxh/tyb/zyxw/t774662.htm).

魯世巍. “新时期中国外交的‘变’与‘不变’.” 『国际问题研究』 2013年 03期.

倪世雄·潛旭明. “十八大以来的中国新外交战略思想初析.” 『人民论坛·学术前沿』 2014年 06期.

趙可金. “新理念引领中国新外交.” 『学习时报』. 2014-01-06.

Kissinger, Henry. 2014. *World Order*.

Lampton, David M.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Age of Obama: looking each other straight in the eye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18, No.62 (November 2009).

Lieberthal, Kenneth G., and Wang, Jisi. 2012. “Addressing U.S.-China Strategic Distrust.” John L. Thornton China Center Monograph Series at Brookings.

Mead, Walter Russell.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the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Vol.93, No.3(May/June 2014).

#### ❖ 저자 약력

##### ■ 신중호

現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중국 북경(北京)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후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 연구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등 역임. 주요 연구 분야는 미중관계, 한중관계, 북중관계, 양안관계 등이고, 주요 연구성과로는 『통일 이후 국가 정체성 형성방안』(공저), 『시진핑시기 중국 외교안보: 그 패러다임의 변화』(공저),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위기관리 행태 및 영향요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미관계와 대만문제” 외 다수.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편집: 강현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김현주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